

국감 초점

국회는 21일 농림수산물품질·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각 상임 위원회 16일째 국정감사를 열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감사자료 폐기 의혹, 메릴린치 투자 손실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직불금 감사자료 왜 두 달 뒤 폐기했나”

가스주 주강수 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

국회 농식품위는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감사자료 폐기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농촌공사가 감사원의 인력 협조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 12명을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한 감사에 지원한 사실을 제시한 뒤 “감사 결과는 지난해 5월초에 나왔고 감사원이 7월26일 비공개 방침을 결정했으며 농촌공사는 8월1일 감사관 임회하여 감사자료를 삭제했다”며 “감사자료가 폐기해야 할 자료였다면 감사가 끝난 뒤 즉시 폐기했어야 하는데 두 달여 동안 가지고 있던 이유와 감사결과를 삭제한 배경은 무엇이나”고 추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지원 하는 과정에서 농촌공사가 직불금과 관련한 감사 내용을 100%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 후 공사 나름대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농촌공사 전산직원의 김영심 씨는 “감사원 감사관이 쌀 소득보전금 등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삭제하라고 해서 서버에 접근해 삭제했다”며 “삭제된 자료는 쌀 소득보전금 2005년과 2006년 수령자 명단과 추곡수매자료 등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의 21일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강수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21일 한국농촌공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물품질위의 농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낙연(가운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계진(왼쪽), 최규성 의원이 쌀 직불금 증인 출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 사장이 1차 공모에서 서류심사에 탈락하고도 2차 공모에서 선임됐다는 점과 출근을 저지한 노조원의 연행 등을 지적하면서 임명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주 사장에게 “1978년부터 20년 넘게 현대그룹 계열 회사에서 근무했고 11년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는데 선전에 대통령

과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졌다.

주 의원은 “임원추천위가 후보자 5명을 압축했으나 지경부는 1차 공모 결과에 대해 재추천하라고 돌려보낸 뒤 임원추천위가 다시 꾸러지면서 추천위원 5명 중 4명이 교체됐다”며 “특히 바뀐 4명 중 2명이 과거 산자부 출신으로 지경부의 뜻대로 하려고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대법관 3명과 ‘특별한 인연’

법사위 국감장서 소회 밝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사진) 의원이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인연이 얽힌 3명의 대법관에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긴장과 흥분, 존경의 마음을 가졌다”면서 “무죄를 확정 지어준 대법관, 비자금 계좌추적을 하도록 재판해준 대법관을 만났고, 검찰에서 기소한 대법관도 만났다”고 운을 띄웠다.

그가 언급한 인사는 안대희·전수안·고현철 대법관.

박 의원은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같은 해 9월 대검 중수부가 현대 측으



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며 뇌물죄로 추가기소했다.

안 대법관은 당시 중수부장이었다고 전 대법관은 2004년 12월 파기환송심을 맡아 검찰에 계좌추적 결과를 요구하는 등 뇌물 혐의 부분의 무죄가 선고될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법관은 2006년 9월 뇌물죄에 대해 무죄확정 선고를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온갖 감회에도 “오직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때는 5년 전 대북송금 특별법자로 자신을 구속기소했던 송두환 재판관과 재회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자금 한푼도 받은 적 없다”

DJ측, 주성영 의원 법적 대응 방침

김대중(DJ) 전 대통령측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 전 대통령 내외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 전 대통령 내외는 단 한푼도 부정한 비자금을 만든 일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 의원이 김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주 의원의 주장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일부 무책임한 교포신문들이 수년동안 거듭 주장해온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국내 일부 언론도 이를 보도했다가 법정에서 패소하고 정정보도를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은 정계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 내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주 의원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 **직종** 행정·세관·법검·철출교보보복소기
 ◎ **정육무세원찰공관정진호지방술**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합격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개강**

◎ **합격 회원 모집**

◎ 6개월 : 90만원 (교재17만원포함)
 ◎ 주·야간반+기초(英·國) 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실히!

www.mdgosl.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주부반·성인반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간반,야간반)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발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라도 및 인근 3F
 국비무료 4층 4F ☎ 971-0002 (구)메트로 힐튼 호텔 광주점 4F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3일 (주,야)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처음시작자신분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의 질을 최우선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인문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학장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기업은행, 대출도 호남지역 차별하나”

국감브리핑

■정무위 김동철 의원

기업은행도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호남권에 대한 지원은 매년 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1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영남 편중개



말이 40여 년간 지속된 결과 ‘수도권 비대화, 영남 편중, 호남 소외’의 국가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으나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으로 ‘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21세기형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게 됐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GRDP(지역총생산) 비중이 47%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수도권 대출 비율은 GRDP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66% 내외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호남지역의 경우 전체 비중의 5% 내외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 지난 8달 현재 4.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문화재 예산 ‘절끔’ 집행”

■문방위 이용경 의원

광주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선진과 창조포의 모임 이용경 의원은 21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국고지원액 실

집행실적’자료를 분석,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수 등을 위해 1천638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됐는데도, 사용된 예산은 고작 4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경우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지원받은 154억5천800만원 가운데 30.2%인 46억7천400만원만 사용했고 광주도 지난해 16억7천8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68.2%인 11억4천500만원만 집행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문화재 보수를 시행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을 미루는 등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NGO 보조금 비효율적 지원”

■행안위 이범래 의원

광주시의 인구 대비 비영리민간단체(NGO) 수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예산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내놓은 광주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301곳으로, 인구 4천718명당 단체 1곳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시(인구 8천681명당 1곳)의 2배 가까이 되고 인천시(6천553명당 1곳), 대전시(5천804명당 1곳), 울산시(4천912명당 1곳)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많다.

광주 지역의 단체들이 지난 3년

간 지급받은 보조금은 1곳당 평균 390만원으로 인천(600만원), 대전(470만원), 대구(450만원), 울산(430만원)보다 적었다.

이 의원은 “성격이 비슷한 2~3개 단체의 대표를 동일 인물이 맡는 경우도 많아 ‘선심성’ 보조금 지원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경찰 경위가 현장 뛰는 순경의 7배”

■행안위 김성조 의원

현장에서 뛰는 순경 수가 간부급 경위의 7분의 1에 그치는 등 광주경찰의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이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계급별로

간부급인 경위는 정원(314명)의 2배가 넘는 844명이고 경사도 정원(603명)의 2배 가량인 1천209명이다”면서 “그러나 경장은 783명

정원에 388명이나 모자란 405명 있었으며 순경은 정원이 874명인데도 현원은 121명에 불과해 총원율이 13%대에 그치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위와 순경을 비교해 보면 순

경 정원이 560명이나 많은데 현원은 순경이 경위의 7분의 1 수준인 14%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경장, 순경이 부족한 것은 그만큼 일선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